

靑에 쓸린 눈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9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2·3·5면>

이번 회동은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 선언문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사실상 통합의 성과를 기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낮 12시 30분에 청와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덕담을 주고받는 신년 인사를 넘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2026년 6월 지방선거 시 통합단체장 선출'이라는 로드맵을 확정 짓는 담판의 성격이 짙다.

최대 관심사는 '속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광주시장·전남지사·지역 국회의원들과 회동 '행정통합' 담판

6월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쟁점...주민투표 아닌 시도의회 의결·통합 인센티브 등 주목

는 2026년 7월 1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관건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다.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자칫 부결될 경우 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 이에 시도는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파스트트랙'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주민 의사 확인 절차 생략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신중론을 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통합추진협의체 구성이 일부 의원의 난색으로 지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날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과 5극 체제 구축을 위해 6월 선거 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식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가 핵심이다.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눈치를 보던 국회의원들도 '선(先) 통합, 후(後) 보완' 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기를 내려놓게 해야 한다는 점도 이 지점이다.

또 다른 쟁점은 파격적인 정부 보상의 약속 여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초광역권'의 선도 모델로서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확실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선언적 지원이 아닌, 구체적인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재정 분야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지방교부세 지원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거론된다.

통합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

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달라는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안의 경우 10년간 최대 80조 원 이상의 재정 확보 효과를 추산하고 있는데, 광주·전남 역시 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재정 보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관한意向도 핵심 의제다. 특히 지역 경제와 밀접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업무를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흡수해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도시에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력히 검토풀 예정이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 시·도당 위원장 공천 참여 금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관리 기구 참여를 금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지방선거기획단이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회는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현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과 관련

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부적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공개할 것을 시도당에 요구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 통합 검증센터'를 설치해 경선 과정에서 유포될 수 있는 허위·조작 정보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콘텐츠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2곳이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가 났고, 최종 4곳에서 보궐선거가 결정된 상태"라며 "많은 10곳까지 예측되는 보선은 전략공천 원칙으로,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경선하고 중앙당 공관위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기본소득 나와도 쓸 데가 없어요

▶6면

북스 - '별자리 신화 백과' '주인노예...' ▶14·15면

KIA '89 트리오' 을 시즌 명예회복 선언 ▶22면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8일 오후 건물 내 조명이 전기 공사 점검을 위해 흔하게 켜져 있다. 옛 전남도청은 이달 31일까지 복원 공사를 마무리한 뒤 4월 5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개관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온 '뚝' ... 주말에 폭설 온다

주말 광주·전남 지역에는 최대 7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10일 광주·전남에 오전(6시~낮 12시)부터 밤(오후 6시~자정) 사이 2~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밤 9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시간당 1~3cm

의 강한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번 눈은 일요일인 11일 오후까지 내리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2도, 낮 최고기온은 7~10도를 보이겠다.

10일은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은 7

~10도로 추위가 반짝 풀리다가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0도, 낮 최고기온 0~3도로 다시 내려갈 전망이다.

다음 주에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빙판길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